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3면	與 ‘대선공작 규탄대회’ 野 ‘민주회복 촛불집회’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위 현장점검	2
江原日報	02면	“강원청소년올림픽, 잼버리 같은 아쉬움 없길”	3
강원도민일보	07면	수리권 개념 정립 불명확 갈등만 지속 이득 없이 불안 이고 ...	4
강원도민일보	21면	HAPPY700배 특자도 파크골프대회	5
강원도민일보	04면	태백 '한국항공고' 국내 최고 마이스터고 도약	5
江原日報	21면	인류기원·자아정체성 찾는 40년 화업 돌아보다	6
설악신문	온라인	간성읍 상1리 경로당 준공식 열려	7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7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전찬성(원주)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박기영(원쪽)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양숙희 도의...	8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최명서(위 왼쪽) 영월군수·윤길로(영월·위 오른쪽) ...	8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원제용(원주)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박호균(강릉) 도의원	8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지광천(평창) 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	9
江原日報	21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춘천)	9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정재웅(왼쪽)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김진호 시의...	9
강원도민일보	03면	현행 선거구제 적용 땐 '춘천 단독분구' 가능성 희박	10
강원도민일보	02면	미래강원 2032 종합계획 수립·강특법 특례 발굴 본격화	10
江原日報	02면	강원산림엑스포 60개국 참가 확정	11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 트롤리버스 운행 보조금 평가 발목	12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지역 긴급차량 출동 시간당 5km 단축	12
강원도민일보	12면	삼척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15일 문 연다	13
江原日報	10면	'5천억 신도시' 춘천 기업혁신파크 본격 경쟁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자치법 개정, 이통장 처우 개선을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버스 완전공영제 적극 검토할 때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남북귀환어부 인권 침해, '특별법' 제정 절실히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뼈를 깎는 대학 구조개혁, 생존이 걸린 문제다	17

2023 09 13 ()
03

江原日報

與 ‘대선공작 규탄대회’ 野 ‘민주회복 촛불집회’

국민의힘·민주당 도당 중앙당 전략에 발 맞추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야가 중앙당과 발 맞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등 상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도당은 ‘김만배·신학립 허위 인터뷰 조작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돌입하는 중앙당 움직임에 적극 동참한다.

허위 인터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가짜뉴스와 관련해 도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내 8개 당협이 도당과 공동 대응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주요 당직자들이 지역 주요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개인 SNS,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선거 공작의 진상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당은 14일 오후 1시30분 도당 3층 회의실에서 ‘강원도 대선 공작 대국민 진상 보고 및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박정하(원주갑) 도당위원장, 권혁열 도의장, 도의회 국민의힘 박찬홍 원내대표, 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참석해 힘을 보탠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12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8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의 전략적 선택에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김우영 도당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당대표가 곡기를 끊고 검찰 독재 정권에 항거한 지 13일째”라며 “도당 당원들도 강원 전역에서 서울을 오가며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 집회

와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당 현안이 매우 중요하기에 도당도 중앙당의 지침과 전략에 잘 대응해 나가면서

도당 전략을 수립하고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도당은 이날 청년정책연구소장에 장영덕 전 원주시의원을 임명했다. 또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홍천황성영월평창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명부 승인을 의결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0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위(위원장 심오섭)가 12일 강릉 아이스아레나, 컬링센터 등을 방문해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점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도의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위 현장점검

심오섭 위원장 제설작업 특별 당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이하 2024강원대회) 개최가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및 감염병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대회부실 운영 등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이 컸던 가운데 2024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 것이다.

도의회 2024강원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오섭)는 12일 강릉 아이스아레나, 강릉컬링센터 등 빙상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또, 도 올림픽시설과로부터 자원봉사자 운영, 감염병 관리, 버스 수송 대책, 교통관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심오섭 위원장은 “폭설에 따른 제설

작업 부분도 특별히 당부했고, 경기를 마친 청소년 선수들이 강원도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도는 숙박·대형음식점 방역소독이 행여부를 점검하여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 집중관리에 나선다.

또,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임시격리병상 3객실, 국가치료병상 16병상, 긴급치료병상 20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 09 13 ()
0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강릉에 있는 경기장 시설을 찾아 조직위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강원청소년올림픽, 잼버리 같은 아쉬움 없길”

강원자치도의회 지원 특위 강릉 방문… 시설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지원 특위)가 12일 강릉을 방문, 현지 시찰을 벌이며 올림픽 시설 전수 점검에 나섰다.

지원 특위는 지난해 11월 구성 후 지금까지 세 차례 평창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에 이어 이날 강릉 아이스아레나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하키센터 등 시설을 점검했

다. 특히 선수와 관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역·수송·자원봉사자 분야에 대한 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오후에는 컬링센터를 방문, 시설을 점검하고 훈련 중인 강원자치도 컬링 국가대표팀을 격려했다.

지원 특위 위원들은 조직위원회를 향해 앞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 같은 아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심오섭(국힘·강릉) 지원 특위 위원장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특위가 마지막으로 강릉 올림픽시설을 살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어 제대로 준비됐음을 확인했다”며 “선수와 관객 모두 안전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특위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07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소양강댐의 빛과 그림자 ②

14. 소양강댐과 수리권

소양강댐 준공 50여 년 간 수리권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데다 댐을 통해 나간 물은 수도권의 산업기반이 됐다. 그리고 그 이익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정부가 가져갔다.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수리권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소양강댐 12.1억·충주댐 33.8억t

수도권서 전체 71% 32억t 사용

물 관리기본법 원칙 부적합

기후위기·산업구조 변화 발생

물 갈등 점차 첨예 가능성 높아

명확한 '수리권' 정의 갈등 해소

■ 수도권 용수 공급 소양강댐·충주댐
소양강댐의 용수는 대부분 수도권에 차지한다. 강원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 '강원도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보면 한강수계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북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자원은 연간 45.9억t(소양강댐 12.1억t·충주댐 33.8억t) 중 서울·경기·인천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32억t이다. 전체에 71%에 달한다. 반면 정작 수자원을 끼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지역에서의 댐 용수 사용량은 총급수량의 6.8%에 불과하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수도권 지역의 용수 공급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댐이 들어선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수리권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르다.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논의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댐 소재지에서는 수리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양강댐 건립 당시 사진. 댐 구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제공=K-water

수리권 개념 정립 불명확 갈등만 지속 이득 없이 불안 이고 사는 댐 소재지

강원도의 경우 연간 30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역에서의 이용량은 2.5%이다. 수도권 지역이 확보하고 있는 규모가 99%에 육박하는 점과 비교하면 물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연구원 역시 해당 연구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도·시·군의회 대응협의체 공동위원장(안전건설위원장)은 "수도권은 소양강댐에서 나오는 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지만 맑은 물을 내려 보내줘야 하는 강원도의 피해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발전방안과 더불어 강원지역의 물 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해수 충주시의장 역시 최근 본지

와의 인터뷰에서 "댐 건설로 인한 이익은 수도권에 차지하고 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와 춘천은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개발은 저해되고 있다"며 "이제는 댐 소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수리권 법마다 해석 제각각

수리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물 사용에 대한 권이지만 각 법마다 정의하

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관행수리권으로 농업용수를 뜻하며 하천법에서는 하천수 허가사용권이, 댐건설관리법에서는 댐사용권이 등장한다.

이중에서도 댐사용권은 물 분장을 야기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댐사용권은 물권으로 정의돼 소유의 개념이 생긴다. 흘러가는 물들이 소양강댐에서 나온 물들과 합쳐지는 순간 소양강댐 용수 사용료가 발생한다. 하천법에서 물의 권리는 국가로 규정, 댐사용권을 위법이라고 보는 일부 법조계의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기후위기,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물로 인한 갈등이 점차 첨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충주댐을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쓰기도 빠듯한 물을 다른 지역에서도 쓴다고 하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용인 반도체 산업을 위해 북한강 물을 갖다 쓴다고 하면 강원도가 반대하는 게 현실이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등이 심화되면 이 같은 갈등 역시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댐사용권 때문에 K-water와 지역 간 갈등이 시작되는 셈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개별법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서로 다른 만큼 물 관리 최상위법인 '물관리 기본법'에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담겨야 하고 배분 원칙도 포함돼야 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현 tpgrus@kado.net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 09 13 ()

21

강원도민일보



HAPPY700배 특자도 파크골프대회 2023 HAPPY700배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가 12일 평창 대화면 파크골프장에서 심재국 군수, 지광천 도의원, 지형진 군체육회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 도내 파크골프 동호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파크골프협회(회장 장경순) 주관으로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04



한국항공고 출범식 및 교명석 제막식이 12일 교내에서 열렸다.

태백 '한국항공고' 국내 최고 마이스터고 도약

내달부터 신입생 모집 내년 개교

태백기계공고가 한국항공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항공인재양성을 위한 비상의 날개를 폈다.

한국항공고 출범식 및 교명석 제막식이 12일 교내에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과 심재성 태백교육장, 문명호 한국항공고 교장을 비롯해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문관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항공고는 오는 10월부터 2024학년도 신입생(항공정비시스템과) 모집에 들어가 내년 3월 개교한다. 학급당 16명, 학년당 3학급(총 9학급 144명)으로 이뤄진다. 항공기 엔진 및

기체 정비, 항공기 전기전자 계기장비 정비, 헬기 정비, 비파괴검사, 항공기 복합소재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항공기 정비 기술자를 양성한다.

문명호 한국항공고 교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국에서 학생이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찬 비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한국항공고의 성공적 학생 모집과 개교를 시작으로 전국 최고의 마이스터고로 거듭나는 여정에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한국항공고는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김우열

인류기원·자아정체성 찾는 40년 화업 돌아보다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G1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임근우 작가의 개인전이 12일 강원대 미술관 1·2전시실에서 개막했다. '작가는 고향의 양분을 먹고 산다(온길-새길)'를 타이틀로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지는 작가의 화풍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날 개막식은 임근우 작가와 유진규 마이미스트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작품명은 'Cosmos-고고학적 기상도/76x192-1x30,000'. 강원대 개교 76년의 시간, 학교 주소 192-1, 강원대 춘천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수인 3만명을 의미하는 화면이다.

권정임(강원대 미술학과 학과장) 강원대미술관장은 임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해 소개했다. 첫 개인전 발표 이후 1990년대 말까지의 시기부터 인류기원과 자아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그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임 작가의 40년 화업을 돌아보는 자리로 꾸며졌다.

임 작가는 전시 기간 일부 작품을 원 작품가의 50%으로 판매, 전시 종료 후 '임근우장학회운영위원회'를

본보-G1방송 공동 주최 임근우 작가 개인전 개막
강원대 미술관서 전시 일부 작품 판매액 장학금 조성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가 G1방송과 함께 마련한 서양화가임근우 작가의 개인전 개막식이 '작가는 고향의 양분을 먹고 산다(온길-새길)'를 타이틀로 12일 강원대 미술관 1·2전시실에서 열려 임근우 작가와 유진규 마이미스트가 개막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박승선기자

구성해 전액을 장학금으로 쓸 예정이다. 임 작가는 "앞으로의 활동도 코스모스를 통한 고고학적기상의 세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우리는 세 시기에 걸친 임 작가의 변화와 성장을 목격하며 독특하고 깊이 있는 세

계관을 마주했다"며 "이 전시가 우리나라 미술계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은 "고향 춘천을 향한 애정이 큰 임근우 작가가 본격적으로 고향에서 보여주실 활동이 기대된다"며 "그의

작품 세계가 보다 큰 영광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김현영 강원대 총장도 "강원대의 자랑이자, 강원대에 몸담고 계신 작가님의 전시를 강원대에서 개최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앞으로 춘천에 머물면서 춘천의 격조를 더욱 올려주시고, 강원대와 뿌리 깊은 인연을 이어가 후학양성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개막식에는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를 비롯해 윤승기 도 문화체육국장, 양숙희 도의원, 신희주 강원대총동문회장,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신희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봉 도미술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한 배기동 세계시민포럼 이사장과 G1방송 대표이사를 지낸 허인구 국민의힘 특위 부위원장, 강원대 총장을 역임한 박용수 국립춘천박물관회 이사장, 오정희 소설가, 심상만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 이종철 전 주 볼리비아 대사, 고창영 한국여성수련원장, 권오열 갤러리 4F 대표 등이 축하를 건넸다.

김수빈·김민희기자

2023 09 12 ()

설악신문

간성읍 상1리 경로당 준공식 열려



고성군 간성읍 상1리 경로당 준공식이 지난달 31일 경로당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최용현 상1리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낙규 기자 nk_2232@naver.com

2023 09 12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평창)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강릉).최종수(평창) 도의원은 13일 오전 10시 도청 2별관 6층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3차개정 특례반영을 위한 농지농업분과 워킹그룹 3차 검토회의에 참석.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13일 오전 11시 원주 행구동 국형사 동악단에서 열리는 2023 동악제례봉행에 아헌관으로 참석.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13일 오후 1시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16회 강원다문화가족 듀엣가요제에 참석.

박기영(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전찬성(원주).양숙희(춘천)도의원은 13일 오후 1시 30분 도청 2별관 6층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3차개정 특례반영을 위한 환경분과 워킹그룹 3차 검토회의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속초).윤길로(영월).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4일 오후 2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10

전찬성(원주) 도의원은 13일 오후 2시 춘천 호반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 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14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09

박기영(왼쪽)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양숙희 도의원은 13일 오후 1시 30분 도청 2별관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환경분과 워킹그룹 3차 회의에 참석한다.



최명서(위 왼쪽)영월군수·윤길로(영월·위 오른쪽)

도의원·최종수(평창) 도의원은 13일 오후 2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2회 한여농 전국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10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13일 오전 11시 원주 행구

동국형사동악단에서 열리는 '2023 동악제례'에서 아현관으로 봉행에 나선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11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13일 오후 2시 춘천 호반

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14

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09 13 ()
21

◇정재웅도의회사회문화위

원장(춘천)은 13
일 오후 1시30분
춘천문예회관에
서 열리는 제16
회 강원다문화

가족 듀엣가요제에 참석.

지광천(평
창) 도의
회 안전건
설위 부위
원장은 13일 오전 10시 도청 2별
관 6층 범국민추진협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
원특별법 농지농업분
과 워킹그룹 3차 회의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16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 13일
오후 2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
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참석하
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09정재웅(왼쪽)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김진
호 시의장은 13일 오후 1시 30분 춘천문
예회관에서 열리는
제16회 강원다문화
가족 듀엣가요제에
참석한다.

2023 09 13 ()
03

강원도민일보

현행 선거구제 적용 땐 '춘천 단독분구' 가능성 희박

중앙선관위 "현 상황 예측 무리"

획정위 "내달 12일까지 확정"

도내 여야 '면적 특례 적용' 강조

차기 총선이 7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도 역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의결(올해 4월 10일)은 불발된 가운데 춘천 단독 분구 실현이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안 마련이 주목된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현행 선거구 중 18곳이 인구 상한(27만 1042명)을 초과, 11곳이 하한(13만 5521명)에 미달해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속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선거구제가 22대 총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기존 지역구 의석 '253석' 내에서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해당안이 적용되면,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먼저 축소시켜더라도 의석이 줄어야 할 곳보다 늘어야 할 곳이 많아 춘천 단독 분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 입장에서 현행 강원도 의석정수(8석) 안에서 6개 시·군이 묶인 초대형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이란 기형적 선거

구가 생겨난 만큼, '춘천 단독 분구'에 따른 불가피한 연쇄적 선거구 조정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춘천 단독 분구 예외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여야는 "인구 외 면적을 고려한 획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해 인구 격차가 큰 지역에 대해선 '선거구 면적 특례'를 적용, 인구 하한에 미달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경우, 4개 시·군이 한데 묶인 복합 선거구가 5곳이나 발생된 강원도는 국회에서 시·도별 의원정수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인구 기준 외 행정구역 총면적을 감안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의석 확대도 기대해 볼 여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어떠한 획정 기준을 확정해 주느냐에 따라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춘천 단독 분구 등 예측안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22대 총선의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내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강원도민일보

미래강원 2032 종합계획 수립·강특별 특례 발굴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가 3대 도정목표(인구 200만·GRDP 100조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중심으로 강원특자도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완성을 위한 10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또, 3차 개정안 마련을 위한 특례 발굴 과제 작업도 본격화됐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종합계획 수립엔 도의회와 18개 시·군, 도교육청, 18개 시군, 도 산하기관 등이 참여, 올해 연말까지 기본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은 내년 6월 윤곽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 도는 부문별 협의체를 최근 구성했다. 도 산하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 강원연구원, 도교육청, 도의회 상임위·정책지원관, 시군 등 총 8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미래강원 2032 발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는 종합계획에서 구체화된다. 종합계획 수립 사전 설명회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3차례 진행된다.

종합계획 수립이 본격화된 것과 맞물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전문가 토론회'가 이날 강원연구원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주민 중심 특례와 특화 산업 모색, 행·재정 분야를 강조했다.

토론회엔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를

2023 09 13 ()
02

비롯해 도청 특별자치추진단 및 각 시·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지사는 "3차 개정안은 2차 개정안에서 무산됐던 특례와 새로 발굴한 과제를 반영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江原日報

2023 09 13 ()
02

강원산림엑스포 60개국 참가 확정

개막 9일 앞두고 입장권 13만여장 판매 흥행 예고
후원금 40억원 이상 모여... 도내 지자체 붐업 동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 60개국이 참가를 확정짓고 후원 40억원 이상이 모이는 등 순항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개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붐업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60개국이 산림엑스포 참가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13·15면

강원자치도와 교류관계인 일본 돗토리현, 나가노현은 물론 중국 안후이성, 지린성, 캐나다 알버타주, 몽골 튜브도, 필리핀 세부, 캄보디아 씨엠펙, 말레이시아 사라왁, 라오스 로앙프라방 등은 물론 26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한다.

입장권은 벌써 13만7,000장이 팔리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추석과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끼어 있어 관람객 100만명 이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계의 후원금도 쏟아지고 있다. 12일 기준 현금 후원은 26억8,500만원, 현물 후원은 15억7,100만원에 달한다.

관심과 열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 개최지인 고성군은 행사장 일원에 계절 꽃과 조형물 등 정원을 조성했다. 주 행사장에는 설악권의 지역 특성을 살린 정원을 조성했으며 용춘리 회전교차로, 인흥리 통일교차로, 원암리 원형 로터리 등에는 백일홍, 국화, 페튜니아 등 다채로운 꽃으로 장식했다.

영월군은 엑스포 입장권 2,023매 구매를 약정했으며 엑스포 기간 10월10일 영월군의 날에는 영월관광,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1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김진태 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회적기업, 농특산품 등을 전시·홍보하는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강원교구 총무원장 성인 스님 등은 12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엑스포 입장권 2,000매를 구매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단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한국불교태고종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 행사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09

춘천시 트롤리버스 운행 보조금 평가 발목

보급평가 시험기관 전국 1곳
평가 수요 몰려 시험일 미정
신청서 접수 11월 운영 목표
시 “시험 통과시 곧바로 운행”

춘천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트롤리 전기버스가 제작까지 완료됐지만 보조금 지급 행정절차에 발목이 잡혀 도입이 요원하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역 관광지에서 도심과 명동 등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차원에

서 트롤리 전기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같은해 개장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와 이듬해 문을 연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과 맞물려 트롤리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트롤리버스는 3대로 운영, 16번 노선(춘천역~중앙시장~남춘천역~시외버스터미널~송암스포츠타운~삼악산호수케이블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시·도비 12억원을 들여 전기저상버스를 개조한 트롤리버스 제작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환경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보급평가 시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운행 일정이 당초 예정 시기인 지난해 상반기에서 올해 초, 올 하반기까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급평가 시험 일정이 연기되는 이유는 시험기관이 전국에 단 1곳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몰리면서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춘천시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춘천시는 11월 운영을 목표로 잡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시험만 통과하면 곧바로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롤리버스를 포함한 의암호 중심

관광자원 조성사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트롤리버스와 함께 공지천 의암호수변을 조망하는 출렁다리를 조성, 12일 해당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길이는 240m 다리를 조성해 의암근린공원과 근화동 하수처리장 인근을 연결하는 게 골자다.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

춘천시는 조만간 착공해 내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암공원과 조각공원 수변산책로를 중심으로 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도 최근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쳐 연말까지 공사를 마친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11

강릉지역 긴급차량 출동 시간당 5km 단축

시 구축 지능형 교통체계 주요
사고 예방·흐름 개선 등 기여
“사업 3년차 곳곳서 효과 실감”

강릉시가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긴급차량의 출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체계 기

반 구축사업을 추진, 1단계에 이어 2~3단계 사업을 추진, 지역 교통체계가 전자동화로 바뀌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올해까지 사업비 750억원을 들여 강릉시 주요도로 110km에 교통정보제공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 횡단보도, 자율주행 지원, 주차관리시스템, 미래교통복합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은 모바일 등을 활용,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해 교통정체 구간을 우회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강릉소방서 22대의 구급차 및 소방차에 설치한 결과, 월 평균 164건이 교차로 정체 없이 신속하게 사고현장 및 병원으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 ‘카눈’ 때에도 도로 통제 정보, CCTV 영상 정보를 G-ITS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자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이용해 지능형교통체계의 효과를 실감했다.

더욱이 경강로, 강변로 등 지역 6개 시내도로는 ITS 구축전인 2020년에 비해 평균속도가 시간당 5km 이상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13개의 관광지와 시내 주차

장의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제공하자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배회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ITS가 교통안전사고 예방, 교통흐름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혁 ITS추진과장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을 3년차 진행하면서 이미 완공된 시스템의 효과가 도심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강릉 ITS세계총회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첨단 모빌리티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나 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12

삼척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15일 문 연다

698억원 투입 세계 최대 규모
시험평가 기술개발 등 운영
국내외 시험인증 시장 선도

국내 최대 규모의 대용량 이차전지(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오는 15일 삼척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삼척시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698억원을 들여 삼척 교통 소방방재특구 내 연구단 일원 1만5500㎡ 부지에 '삼척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건립,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삼척 검증센터는 한국형 ESS 시스템 화재 안전 및 설치 운영기준 개발을 비롯해 이차전지의 화재안전성 등 시험평가 기술개발 등에 따른 인증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인력과 인증기준, 시험인증 기반을 갖춰 국내·외 시험 인증 시장 선도에 나설 계획이다.

ESS는 태양광·풍력 발전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전기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배터리 시스템으로, 계절·날씨 등의 부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 ESS 도입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잇따른 화재

등으로 인해 사업 확장성에 제약을 받으면서 정부가 삼척 검증센터 설립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인 30MW 화재시험장 등 최첨단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어 국내 굴지의 배터리 제조자들이 관련 제품 수출 등에 따른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연계해 다양한 지역 산업군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삼척 검증센터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江原日報

2023 09 13 ()

10

'5천억 신도시' 춘천 기업혁신파크 본격 경쟁

국토부 이달 초 공모 전국 지자체 중 2곳 12월 선정
남산면 광관리 일대 ... 시-더존비즈온 사전 연구 용역

【춘천】정부가 연내 기업혁신파크 지자체 선정을 예고하면서 춘천시가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공고를 내고 11월 접수, 12월 대상지 발표를 예고했다. 전국 지자체

중 2곳 이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의 기업도시와 비교해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 신속한 개발이 가능토록 보완한 정책이다. 강원자치도 내

에서는 시와 원주시가 지정도전 의사를 밝혔고 앞서 강릉시, 평창군 등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전국 지자체의 각축전이 전망된다.

시는 데이터 중심 바이오 클러스터를 기업혁신파크 기본 콘셉트로 정하고 정밀 의료 산업, 바이오 산업, IT 및 데이터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남산면 광관리 일대

335만㎡ 부지에 2030년까지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앵커기업을 물색 중인 타 지자체와 달리 시는 더존비즈온을 파트너로 올 6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사전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발 빠르게 도시 개발 밑그림을 그려 왔다.

시는 정밀 의료 규제자유특구, 데이터안심구역 등 기존의 정부 특례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과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 내 6개 대학이 위치해 인재 육성과 기업 인력 공급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

시 관계자는 "도시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빠르게 준비해왔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만큼 세밀하게 사업안을 보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 19

자치법 개정, 이통장 처우 개선을

-법적근거 없어 업무 어려움, 운영비 보장해야

공무원과 주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통장 법적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이통장의 활동은 행안부장관령, 또는 각 지자체 단체장의 조례나 령으로 정해지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처우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이통장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통장들은 행정과 마을, 주민 사이를 오가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정 시책 전달, 생명지킴이 활동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과 백신 접종 독려를 하며 위기를 넘기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의 활동은 행정 시책 전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역의 역점 사업을 챙기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 보호와 세대 조사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업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운영비 확보입니다. 현재 도지부와 각 시·군 연합회는

이·통장들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활동이 법으로 보장되면,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제각각인 이·통장들의 지원 범위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강원도내 이·통장들은 월 30만원 수당과 통신비를 비롯해 2년에 1번씩 건강 검진비를 지원받습니다. 일부 지역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등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통장들의 처우 개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10여년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갖은 업무에 생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처우는 미흡합니다. 사무실 임대료나 공과금을 사비로 부담한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통장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통장들은 앞으로도 현장의 민원을 행정에 전하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대처와 마을 안위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법적 지위 보장과 더불어, 업무를 원활하게 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13 ()
/ 19

버스 완전공영제 적극 검토할 때

-수백억원 재정지원형 민영제 한계, 군단위 더 유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둘러싸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주시는 최근 '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원주는 시내버스 운행 손실분의 일정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인데 업계 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장기화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운영 체계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현행 재정지원형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양구에서는 한단계 나아가 몇개월째 현지 운수업체 버스노동자와 시민단체에서 완전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과 일선 버스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버스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구도 원주에서와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의 재정지원금이 버스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는 데 그치고 공공성 강화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률은 지지부진해 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고민이 큼니다. 춘천 시내버스 이용률은 2019년 12.2%에서

2020~2021년엔 8%대로 낮아졌다가 22년엔 다행히 10.2%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면서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 수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가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버스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등 인적요인이 큰데 '신분적 안정'이 사고를 줄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운전태도 역시 전체적으로 안전운전에 법규준수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 보장 실시로 버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채택해 다양한 효과를 내는 지역은 주로 군단위 농촌과 중소도시인 것으로 볼 때 강원 지자체도 완전공영제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정지원형 민영제와 공영제 간 재정 격차도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준공영제라도 농어촌 노선은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적 전환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자리잡지 못하면 교통문제는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시민활동과 밀접한 공공복지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최적의 답이 나옵니다.

江原日報

2023 09 13 ()

/ 19

납북귀환어부 인권 침해, '특별법' 제정 절실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국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와 진실화해위원회, 강원일보 등 언론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납북귀환어부 탄압은 철저히 의도된 국가폭력사건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북의 도발에서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어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심지어 간첩으로까지 몰아갔다. 따라서 어민들을 상대로 자행됐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특별법 제정은 약 3,600명으로 추산되는 납북 어부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에서 드러난 어부들의 인권 피해는 처참했다. 정상적으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이들을 맞이한 것은 가족이 아닌 수사기관이었다. 영장도 없이 구금된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월선 및 간첩 지령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당했다. 이후 신체적 후유증과 간첩이라는 오명, 장기간에 걸친 감시와 사찰에 시달렸다. 배우자와 자녀도 취업·주거 이전에 제한을 받으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친·인척들까지 연좌제 피해를

입었다. 국가가 어부들을 공안몰이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피해다.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가 명예 회복과 경제적 배·보상이다. 피해를 포괄적으로 구제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이 과거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발전된 미래로 향하는 길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사실 은폐·왜곡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낱알이 밝혀졌다. 과거사의 비극을 안고 사는 피해자들의 억울한 삶이 더 이상 묻혀서는 안 된다. 특별법 제정은 과거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 프로젝트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더 나은 인권 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범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가가 잘못했다면 국민에게 당연히 사과하고 보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江原日報

2023 09 13 ()

/ 19

뼈를 깎는 대학 구조개혁,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역 대학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는 대학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 수능 응시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도내 응시자는 1만2,179명으로 역대 최저 인원을 나타냈다. 도내 수능 응시자 수는 2018학년도까지만 해도 1만5,000명대를 유지했지만 2020학년도 1만3,654명, 2021학년도 1만2,347명 등으로 1,000명 이상씩 감소하다가

2023학년도에는 1만2,000명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강원지역 고3 학생 수는 1만1,699명으로 도내 4년제 9개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인 1만2,

942명(정원 내)보다도 적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도내 대학들이 강원 학생들을 전부 유치해도 정원은커녕 수시 모집인원조차 채우기 어렵다는 얘기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는 우선 관할하에 있는 국립대부터 과감한 통폐합을 진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금 대학 간 학점이나 강의 교류 같은 수준의 논의에 그칠 때가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국립대 통폐합에서 모범을 보여야 부실 사립대학들도 설득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가에서 그동안 낮은 단계의 구조개혁인 연합체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연합체 논의

조차 온갖 기득권 벽에 부딪혀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대학 구조개혁은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다. 우선 지역 대학 스스로 인구 감소 등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구조개혁에 나서면 일차적으로 지역 대학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대학 구조개혁을 4년제 일반대학 위주로 생각하면 곤란하며 전문대학의 위기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학의 구조개혁

이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공론화되다 보니 학벌주의나 대학 서열 구조가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크다.

물론 이 사안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문대학

도내 2024 수능 응시자 1만2,179명 역대 최저
국공립대부터 통폐합, 가시적 성과 내야 할 때
전문대학 위기에도 눈 돌려 정부 지원 늘려야

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 출신의 젊은이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진은 높은 등록금 부담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시달리며 마구잡이 구조개혁의 부작용에 신음해 왔다. 전문대학 대다수가 국공립이 아닌 사립이고 정부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학벌주의 타파에 집착하다 보면 개혁의 목소리에 뜻하지 않게 계급적 한계가 짙게 깔릴 위험이 있다. 여기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야 할 때다. 즉,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연구를 뒷받침할 학문 정책이 필요하고, 입학만 하면 졸업이 가능한 관행도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바뀌어야 한다. 또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전문적인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